



湖南新聞



1946년 3월 창간 제 2692호

이메일 : ihonam@naver.com

홈페이지 NAVER

호남신문

검색

2019년 3월 21일 (음력 2월 15일) 목요일

지역화폐 '광주상생카드' 출시...경제 살리나



광주시는 20일 오전 시청 시민 숲에서 '광주상생카드 출시 기념행사'를 갖고 59개 기관·단체와 광주상생카드 활성화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

광주시가 20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인 '광주상생카드'를 출시했다. 지금의 역외유출을 막고 지역 내 소비를 확대해 골목상권을 살리자는 취지다.

광주시는 이날 오전 시청 1층 시민홀에서 이용섭 광주시장과 각급 기관·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상생카드' 출시 기념행사를 갖고 58개 기관·단체·기업 등과 상생카드 활성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는 삼성전자 광주공장, 기아자동차, 금호타이어 등 대기업도 참여했다.

광주시와 기관·단체들은 공공기관 복지포인트와 포상금, 민간단체나 기업의 포상금, 명절선물 등을 광주상생카드로 지급하는 활용방안을 추진한다.

◇광주상생카드 출시

민선7기 이용섭 광주시장의 지역화폐 도입 방침에 따라 이날 출시한 광주상생카드는

기념식 체크카드와 무기명 정액형 선불카드 2종이다. 선불카드는 3만원·5만원·10만원·20만원·50만원권 등 5종류다.

카드를 운영대행사인 광주은행 모든 지점과 인터넷, 모바일앱 등을 통해 발급받을

을 막기 위해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유통업소 등은 제외한다.

연매출 5억원 이하 영세·중소기업점은 카드결제수수료가 전액 감면된다.

광주상생카드 사용에 따른 주요 혜택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일반카드 대비

골목상권 살리기·자금 역외유출 방지 기대 연말정산·캐시백·입장료 할인 등 혜택 다양 시민단체·시의원 "준비 안 된 제도" 우려감

을 수 있다. 광주시는 매년 1000억원 규모로 광주상생카드를 발행할 예정이며 국비와 시비 등 43억원을 투입해 선불카드 할인과 수수료 감면 등을 지원한다.

광주상생카드는 지역내 소상공인 업체 9만여 곳에서 사용되며, 자금의 역외유출

2배 이상 캐시백 적립, 기아멤버스 필드·놀이공원 할인 등이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광주의 돈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 내에서 순환돼야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이 살아나고 광주경제가 경쟁력을 갖게 된다"며 "광주상생카드는

시민의 힘으로 지역경제를 지키고 발전시켜 나가는 동력이다"고 강조했다.

◇부작용 우려 목소리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도입 취지와 다양한 혜택에도 불구하고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광주경찰청 등 지역화폐 정상화를 위한 시민모임은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광주시가 형식적인 공청회를 개최한 후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보완책도 만들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화폐 출시를 공표했다"며 "지역카드 수요자인 시민들은 기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사용이 제공되는 혜택과 지역화폐의 차이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각종 할인과 캐시백포인트만으로 지역화폐의 소비를 유인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시민모임은 "소비자의 결제 수단이 첨단화, 다양화해 가는데 단순히 지역 체크카드에 머물러서는 안된다"며 "시대의 흐름에 맞춰 광주 지역화폐가 모바일, QR코드 등 다양한 수단이 가능하도록 보완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광주시의회 장영주(정의당·비례대표) 의원이 "광주시가 지역화폐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운영업체인 광주은행이 제시한 캐시백서비스 제공 조건 등을 보면 일반 체크카드와 비교해 큰 차이가 없어 경쟁력이 있는지 의문이다"고 우려했다.

한편 전국적으로 지역화폐는 62개 지자체가 발행중이며 100여개 지자체가 도입을 검토중이다.

서은홍 기자



의혹?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문재인 정권을 '운동권 색은 뿌리'로 비유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황 대표는 19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권의 핵심 세력은 80년대 운동권 출신'이라며 '타협 대신 대결적 사고방식이 지배하는 그들에게 한치란 집단사고의 뿌리로부터 태어난 가시꽃들의 향연일 뿐'이라고 썼다. 이어 '색은 뿌리에서 꽃이 피지 않는다.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메시지는 최근 여론이 제기한 자신의 의혹에 대해 장문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여론에선 전남 문제인 대통령이 철저한 수사를 지시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발상 성립대 의혹과 관련,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 대표가 검찰 수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한편 KT 새 노조에선 황 대표의 아들이 KT 법무팀에 특채됐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관련 인사들의 추세를 상상해 본다.

서은홍 기자·자료사진=뉴스1



전남 해상서 잇단 선박사고 "각별한 주의 필요"

최근 전남지역 해상에서 선박 사고가 잇따르면서 운항 선박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0일 여수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38분께 여수시 오동도 동쪽 5km 해상을 지나던 494급 석유제품운반선에서 불이나 해경에 의해 4시20여분 만에 꺼졌다.

이 불로 선원 6명 중 2명이 숨지고 4명이 구조됐다. 운반선 조타실·선실 등이 탔

며, 해양 오염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선실에서 불길'이 치솟았다'는 선원들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지난 17일 오후 1시37분께에는 신안군 하의도 한 갯바위에서 조업 중 실종됐던 A(70)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같은 날 오전 7시30분께 하의도 해상에서 그물 작업을 하던 중 바다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5일 오후 5시44분께에는 영광군 송이도 남서쪽 2km 해상에서 3명이 타고 있던 44급 예인선 G호가 침몰했다.

이 사고로 G호 선장·기관장이 침수 지점과 18km가량 떨어진 해상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해경은 실종된 G호 갑판장 김모(74)씨를 찾기 위해 닻새채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G호를 인양해 정확한 사고 경위와 원인을 조사 중이다.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해양선박 사고는 1만664건이다. 인명피

해는 234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원인은 기관 손상이 2925건(31.1%), 충돌·접촉 1175건(12.5%), 좌초 557건(5.9%), 화재·폭발 485건(5.2%)순이었다. 주요 사고의 85.4%가 운항과실 부주의, 정비불량 등 인적요인에 의해 발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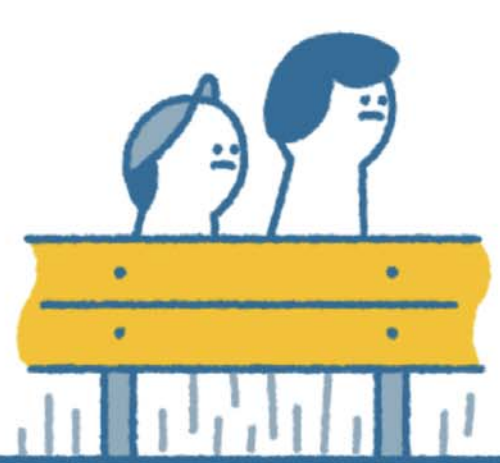
해경 지방청별로 보면, 목포가 985건으로 가장 많았다. 통영(908건), 서귀포(879건), 여수(866건) 순으로 조사됐다.

해경 관계자는 "운항 전후 안전점검과 안전 수칙 준수 등 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여수=송기홍 기자

사람의 스마트 고속도로

고속도로에서 사고나 고장이 나면



1 비상등 켜고 트렁크 열고

2 가드레일 밖 우선대피

3 사고신고 1588-2504

사람이 우선입니다

ex 한국도로공사